

# 여야 예산안 격돌 '감세'가 쟁점

## 상임위별 심사 착수...FTA 등 맞물려 신경전

국회가 11일 283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여야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감세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한나라당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벼르는 핵심 법안을 민주당이 '악법'으로 규정한 점도 관건이다.

이들 법안이 예산안과 연계될 경우 여야간 충돌은 격화될 전망이다.

우선 외교통상통일위에서는 한미 FTA 문제로 개의 예정시간인 오전 10시에 열리지는 못하는 등 출발부터 격돌했다.

민주당은 외통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FTA 선(先)비준'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힌데 이어 한나라당이 비준동의안 직권 상정 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외통위를 보이콧하겠다는 으름장을 놨다.

전날까지만 해도 '12일 공청회 직후 상정'이라는 강수를 떠던 한나라당은 이날 '강행처리 배제' 가능성을 시사, 한미FTA에 대한 민주당과의 협상 여지를 일단 납득시켰다.

또,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의 기초로 잡은 재정지출 및 감세의 동시 확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야간 침에한 신경

규모로는 대응이 곤란하다"며 진압장비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촛불시위 당시 과잉 진압 논란이 있었던 물포를 4대 확충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4억8천만원을 들여 첨단 채증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초상권 논란 등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식경제위의 지식경제부 예산안 심사에서는 정부가 지방발전 대책으로 제시한 '5+2 광역 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발전 방안' 관련 예산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이 벌어졌다.

행정안전위의 경찰청 예산안 심사에서는 미국산 쇄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과정에서의 경찰 강경 진압 논란이 재연됐다.

경찰의 물포 확충 등 시위 진압장비 구매예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현재 경찰이 시위진압용 물포 14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촛불집회와 같은 대규모 집회 상황 발생시 현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11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예결위원회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정부 제출 세입·세출안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연합뉴스

## 예결위 공청회, 세입·세출 타당성 논쟁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국회 예산 결산특위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세입·세출안의 타당성이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발자들은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및 조세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우선 감세 정책과 관련,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장은 "많은 연구결과는 재정지출보다 감세

확대가 보다 효과적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다른 면에서 결론 양면한 감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감세에 방점을 뒀지만 김유찬 경실련 재정경제위 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소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인하는 어느 계별 분야에서도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수정예산안에서 밝힌 내년도 경제성장률 4%에 대해서는 낙관론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김상현 한국재정학회 이사는 "정부의 2009년 성

장을 전망치는 매우 낙관적으로 보인다"며 "세계적 경기침체가 장기화돼 실질성장률이 4%를 밟힐 경우 세수입이 예상보다 줄어들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지출과 감세 확대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인 민음 중장기 운용계획을 재수립해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을 표시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작자재정을 운영하다 2~3년 지나 경기가 좀 안정된다면 해서 그걸 줄일 수 있겠느냐. 줄이면 또 다른 충격이 오지 않겠느냐"며 중장기 운용계획의 재수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장을 전망치는 매우 낙관적으로 보인다"며 "세계적 경기침체가 장기화돼 실질성장률이 4%를 밟힐 경우 세수입이 예상보다 줄어들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지출과 감세 확대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인 민음 중장기 운용계획을 재수립해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을 표시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작자재정을 운영하다 2~3년 지나 경기가 좀 안정된다면 해서 그걸 줄일 수 있겠느냐. 줄이면 또 다른 충격이 오지 않겠느냐"며 중장기 운용계획의 재수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종부세, 13일 '생사 기로'

### 현재 결정 임박...위헌 판결을 반영한 대안을 수도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 세 위원 소송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종부세법 7조에 들어 있는 일부 합법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종부세는 이미 정부의 개편안을 통해 사실상 '사행'이 구현된 상태인 만큼 현재의 판단에 따라 아래 그 운명이 다하게나, 불만 남은 재 유명무실해지거나, 아니면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으며 되살아날 수 있는 길임길에 있다.

소송의 쟁점은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 부과하는 점 ▲가구 1주택자에게도 물리는 점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등 3가지로, 이중 하나만 위헌 결정이 내려져도 정부의 개편 작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그 폭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

현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는 종부세법 7조에 들어 있는 일부 합법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나와도 추가로 법안을 손질해야 한다.

이처럼 현재가 쟁점 가운데 일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종부세는 간판은 유지하지만 법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위헌의 범위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세대별 합산 조항만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전체 종부세는 아니더라도 세대 합산 때문에 종부세가 부과된 납세자들이 경정청구를 요구하면 돌려줘야 한다.

다면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연합뉴스

## "서민 대출 해결방안 연내 강구"

### 李 대통령 각의 주재... "지방 경쟁력 갖도록 지원"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어려운 서민들이 은행에서 단돈 200만~300만 원을 대출을 받는 게 더 어려워졌다"

이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면서 "특히 중소기업 지원은 제때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원을 해도 무너질 부실 기업과 조급한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을 잘 구분해 판단하는 것

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면서 "특히 중소기업 지원은 제때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과 관련, "지방도 차별화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지금도 지방이 경쟁력을 가

/연합뉴스

### 2010학년도 교사 임용시험대비

\* 교과교육학 학습방법론 강의  
\* 2차 시험 대비를 위한 논술 첨삭지도 실시

## 국내영교육학

교사임용, 진짜 승부는 교육학에서 결정된다!

국내영교육학에서 습득한 학습방법론이야말로 교사임용시험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겨울방학특강 사전예약접수중

개강 : 1월 2일(기본 이론 2개월완성)

똑똑한 강의 선택!  
한 번 배워 평생가는  
학습방법론 제시  
직접 확인하십시오.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통파  
국내영 선생 저자직강

교원임용 동영상강의 전문 - www.eduvieview.net

## 에듀뷰넷

▶ 교원임용 공개설명회 : 비전 임용시험제도 인내 및 효율적인 학습방법 상담

▶ 등록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 전화 주십시오.

교원임용고시 전문

교